

한국플랜트학회 초청 강연

2004. 11. 8(월) 18:30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플랜트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

2004. 11.

국회의원 김진표

【 목 차 】

1. 최근 대·내외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동향
- 2) 해외경제 동향

2.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여건

- 1) 고비용-저효율 구조
- 2) 경제구조의 양극화
- 3) 경제성장률 둔화와 성장동력의 변화
- 4) 노사관계 악화 및 노동시장의 경쟁력 상실
- 5) 고용창출능력 약화와 청년실업난 지속
- 6) 대외적 여건

3. 경기활성화 대책-재정의 적극적 역할

- 1) 재정의 적극적 역할
- 2) 연기금의 생산적 활용

4. 플랜트 산업의 육성

- 1) 플랜트산업의 중요성
- 2) 플랜트 산업 육성 방안

5. 부품·소재산업 육성

6. R&D 투자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7. 맺음말

II. 최근 대내·외경제 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현재 우리경제는 활력을 되찾아 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상황은 아님
 - '0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가 전환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상반기 5.4% 증가)하는 등, 지난해 3/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유지
 - 지난해 2/4분기 이래 지속되어온 내수의 감소추세가 2/4분기에는 2.2% 증가로 반전, 이중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쳐 감소세를 멈추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설비투자는 6.2% 증가하여 내수 증가 반전을 견인
- 향후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되는 한편 민간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수출) 8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여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지속하였고, 수출 또한 9월까지 30%를 초과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
 - *산업생산(%) : (04.1/4)11.0→ (2/4)12.3→ (7)12.8→ (8)10.6
 - *수출증가율(%) : (04.1/4)37.7→ (2/4)38.8→ (8)28.8→ (9)23.5
 - (민간소비) 7월중 상승(전년동월대비 0.3%)기미를 보이던 도소매판매는 8월중 1.5% 하락하는등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도소매판매지수(%):(04.1/4)0.1→ (2/4)△0.3→ (7)0.3→ (8)△1.5
 - (설비투자) '04. 8월중 설비투자는 5.0% 증가하여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
 - *설비투자추계(%):(04.1/4)△3.8→ (2/4)2.5→ (7)2.3→ (8)5.0

- (물가)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여 정부 전망치인 3%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음.
- (실업) '04. 9월중 실업자는 747천명으로 전월대비 54천명(-6.7%)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2%로 0.3%p 하락
 - * 실업률(%) : ('04.1/4)3.8 → (6)3.2 → (7)3.5 → (8)3.5 → (9)3.2
- (금융시장) 8월중 콜금리 인하 이후 금리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미 증시 부진 및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으로 약세 시현. 또한 신용불량자수가 감소하고 카드채 발행이 증가하는 등 신용불량자와 카드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는 상황
 - *주가: (03말)811→ (04.4.23,고점)936→ (8.2,저점)720→ (10.22)828
 - *국고채(3년): (03말)4.82→ (04.6말)4.24→ (8말)3.56→ (10.22)3.54
 - *신용불량자(만명): (03.12)372 → (04.3)377 → (7)370.0 → (8)368.5
- (외환시장) 원화환율은 엔화강세와 수출대금의 공급 증가 등으로 연초 1,190원대에서 1,140원대로 하락
 - * 원/달러 : (03말)1,192.6 → (04.7말)1,170.0 → (10.22)1,140.7

2) 해외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올해 4/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성장기조는 유지할 전망

<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

	잠재성장률	04년 전망		05년 전망	
		IMF	OECD	IMF	OECD
미국	3.0~3.5%	4.3%	4.3%	3.5%	3.7%
유로	2% 내외	2.2%	2.0%	2.2%	2.4%
일본	1.5~2.0%	4.4%	4.4%	2.3%	2.8%
중국	8% 내외	9.0%	8.3%	7.5%	7.8%

- (미국) 2/4분기 미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3/4분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03.1/4)1.9→(2/4)2.3→(3/4)3.5→(4/4)4.4→(04.1/4)5.0→(2/4)4.8

*산업생산(전월비,%): (04.4)0.5→(6)△0.3→(7)0.7→(8)△0.1→(9)0.1

- (유로)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던 유로권은 하반기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05년에는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

* OECD 유로지역 GDP 성장률전망(%):('03)0.4→('04)2.0→('05)2.4

- (일본) 일본경제는 올해 4%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내년 초 조정과정을 거쳐 '05년에도 2%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일본 분기별 성장률 전망(%): (04.3/4)4.5→(4/4)3.1→('05)2.0

- (중국) 중국경제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9%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GDP성장률(전년동기,%): (03.3/4)9.6→(4/4)9.9→(04.1/4)9.8→(2/4)9.6

□ 고유가는 성장기조 유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불안, 멕시코만 연안의 석유생산 차질, 미 석유재고의 감소,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및 세계 석유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두바이유(\$/b): (03)26.89.6→(04.8)38.6→(9)35.6→(10.15)37.6

2.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여건

1) 고비용-저효율 구조

- 최근 우리경제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 대기업위주의 성장 전략이 낳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재원을 대기업 위주로 배분하고 선진국(주로 일본) 기술의 '베끼기 투자'로 성장을 지속해 옴.
 - 그러나 ▲ 성장에 따른 분배요구의 분출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 높은 임금 및 지가상승률로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 ▲ 경제개방화와 세계화 진전 등이 중첩되면서 우리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직면
 - 노동·자본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 증대를 추구하였던 과거의 산업정책은 한계에 도달
 - 고속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산업의 경우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면서 과거와 같은 '베끼기 투자'가 한계를 노정
 - 선진국과의 신기술·신제품 경쟁에서는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하여 투자위험이 크게 증대
- ==> 기업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음.

□ 고비용 실태

-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인 대만은 물론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임.
 - 2002년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임금/생산성)은 100.8로 대만(78.6), 일본(82.1), 미국(99.6)을 상회

- 1990년과 2001년도의 달러화로 환산한 제조업 월평균 명목임금 변동 내역을 보면, 한국은 10년동안 1.58배증가하여 일본(1.38배), 대만(1.38)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음.
- 국내 공단분양가도 영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임
 - 2003년 한국 국가산업단지의 평당분양가는 40.0만원
 - 영국의 7개공단 평당분양가격: 20.3만원
 - 중국상하이 푸둥지구: 7.8만원
 - 말레이시아 쿨림첨단기술단지: 16.7만원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내수간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등 경제구조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는 등 소위 ‘소득1만불의 덫’ 현상에 직면해 있음.

2) 경제구조의 양극화

- (수출·내수의 양극화)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와 수출 기여율이 2002년 각각 57.3%, 42.7%에서 2003년 각각 1.8%, 98.2%로, ‘04년 1/4분기에는 -4.9%, 104.9%로 양극화
- 그러나 2/4분기들어 설비투자의 호조(6.2%증가)로 내수부문의 기여율이 14.6%로 상승하고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85.4%로 하락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수출 기여율(%) >

	2002	2003	'03. 4/4	'04. 1/4	'04. 2/4
내수	57.3	1.8	△4.7	△4.9	14.6
수출	42.7	98.2	104.7.	104.9	85.4

-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 IT산업-비IT, 대기업-중소기업, 중화학-경공업간 생산격차 확대

< 부문별 생산증가율 격차 >

(단위 : %p)

	IT-비IT	대기업-중소기업	중화학-경공업
2001~2002년	10.9	1.0	4.9
2003년	12.8	5.3	11.1

자료 : 한국은행

- (경제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수출·내수의 양극화로 우리 경제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상황,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 등 해외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 비IT산업,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선도부문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뒤쳐져 경제성장의 고용증대 효과가 제약
 - 고용이 뒤따르지 않는 성장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득이 정체됨으로써 소비의 회복을 저해

3) 경제성장률 둔화와 성장동력의 변화

- (경제성장률 하락) 외환위기 이전 GDP 성장률은 연평균 7.6%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 이후('97~'03)에는 4.4%의 저성장 유지

< 경제성장률 추이 >

'70-'79	'80-'89	'90-'96	'97-'03
8.6%	7.6%	7.6%	4.4%

- (성장잠재력 약화) 주요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80년대 7%대에서 '00년 이후 5%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양적 생산능력이 한계에 봉착

< 주요 기관의 잠재 GDP 추정치 >

(단위 : %)

	'81~'90	'91~'00	'00~'03	'04~'13
한은	7.5	6.6	4.8	3.9~5.4
KDI	7.8	6.3	-	4.6~5.2

- **고령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노동인구의 감소 및 각종 사회보험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
- **(성장동력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소비 및 투자의 GDP 구성비중이 감소한 대신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대외경제 여건에 의존하게 되었음
 - 선진국들의 경우 수출비중은 10%대 초반으로 대외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 * 수출의 GDP구성비중('97~'03, %):1.9(미국), 10.6(일본), 49.0(한국)
 - 내수(투자+소비)의 GDP 구성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크게 둔화
 - 외환위기 이전 4.7%에 달하던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6%로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는 3.6%에서 $\Delta 0.7\%$ 로 GDP 성장률을 훼손

< 부문별 GDP 구성비 및 성장기여율(도) >

(단위 : %)

GDP 구성항목	외환위기 이전('90~'96)			외환위기 이후('97~'03)		
	구성비	기여율	기여도	구성비	기여율	기여도
• 소비	65.21	63.03	4.73	60.13	51.85	1.63
• 투자	36.30	42.54	3.56	25.82	35.74	$\Delta 0.70$
• 수출	25.69	43.08	3.19	49.03	89.46	6.39
• 수입	27.38	$\Delta 48.16$	$\Delta 3.79$	33.94	$\Delta 62.86$	$\Delta 2.30$

-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기존 주력상품에서 중국 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 한국: '01년 72개 \rightarrow '02년 77개로 5개 품목 증가
 - 중국: '01년 725개 \rightarrow '02년 757개로 87개 품목 증가

4) 노사관계 악화 및 노동시장의 경쟁력 상실

-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과 대립적 노사관계 등으로 과거 고도성장기에 누렸던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
 - 매년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을 빠르게 상승시켜 기업경영의 부담으로 작용
 - 노동생산성은 1999~2000년 중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시간당 명목 임금은 10.4%나 증가

- 한국의 노사관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30대 경제권에서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2004 IMD평가)
 - 대립적 노사관계는 대외신인도와 외자유치를 심각히 저해
 -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이 대립적 노사문화
 - 주한 외국인들은 노사문제(57%)와 행정규제(43%)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전경련 외국기업 76개사 조사)

5) 고용창출능력 약화와 청년실업난 지속

-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고용창출능력도 약화되고 있음.
 - 고용유발계수는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0년 산업구조가 '90년 산업구조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

< 고용유발계수 추이 >

	1990	1995	2000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6.8	18.1	12.4

-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청년 실업률이 큰 폭으로 확대
 - 청년층의 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상 → 생산성 저하 → 성장동력의 약화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

6) 대외적 여건

□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세계화·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음.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세계시장의 통합과 동시에 지역블럭화가 진행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
- 금융부문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Global Standard에 맞는 유연한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FTA 체결

- 미주, ASEAN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시도
- FTA를 위협요인이 아니라 선진기업의 유치와 경제체질 강화를 달성하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
- FTA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시기를 놓칠 경우 세계경쟁에서 고립되고 무역에서 저부가산업에 특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IT관련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IT산업의 성장세가 비IT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상회

- 정보통신 관련 수요 급신장,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 등은 IT산업의 성장을 촉진
- 앞으로 기업간 격차는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격차, 자금조달 능력의 격차 등에 좌우

□ 중국의 부상

- 중국이 엄청난 경제규모와 성장속도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대두
 - 중국경제는 대규모 시장, 고성장, 낮은 인건비 등 고성장-저비용 구조의 매력을 보유
 - * 저성장-고비용 구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매력도 저하
- 중국의 급부상은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내기반을 흔들며 고용악화를 초래
- 국내 수출 주도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경우 1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이미 중국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힘입어 하이테크 부문까지 무서운 속도로 잠식중
 - '02년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세계6위)을 추월했으며 작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로 부상
-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를 이룰 때 중국의 성장과실을 계속 향유할 수 있을 것임.

==>우리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임.

또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경제의 양극화를 방지해야 할 것임.

- 경기활성화-재정의 적극적 역할
- 플랜트산업, 부품·소재산업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육성
- R&D 투자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 외국인 투자 여건의 조성
- 교육·의료제도의 경쟁력 확보 등

3. 경기활성화 대책 - 재정의 적극적 역할

1) 재정의 적극적 역할

-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의 단기적인 순환과정에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 특히, 금융국제화 추세에 따라 금리·환율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왔음.

- 일부에서는 과거 6~7년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치중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거나 일종의 마약주사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 주장.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최근 수년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하면서 재정규모 증가율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
 -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 예산(일반+특별 총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 (91~00년) 1.25 → (01~04년, 국회 與小野大 상황) 0.58
 - (일반+특별 순계)규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 (91~00년) 1.23 → (01~04년, 국회 與小野大 상황) 0.76

 - 특히 2004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4조원 감소, 추경(1.8조원)을 포함하더라도 1.6조원 감소
 - '04년도 예산규모(추경포함)의 경상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 : 일반+특별회계 총계 $\Delta 0.25$, 순계 $\Delta 0.11$

<경상성장률에 대한 재정규모 탄성치(재정규모 증가율/경상성장률)>

	일반 회계	일반+특별 총계	일반+특별 순계	통합재정 규모
'91~'00년간 (재정증가율/경상성장률)	1.04 (12.5/12.0)	1.25 (15.0/12.0)	1.23 (14.7/12.0)	1.20 (14.4/12.0)
'01~'04년간 (재정증가율/경상성장률)	0.98 (7.6/7.7)	0.58 (4.5/7.7)	0.76 (5.9/7.7)	1.14 (8.9/7.7)
'04년 경우(당초) (재정증가율/경상성장률)	0.03 (0.2/8.0)	△0.38 (△3.0/8.0)	△0.26 (△2.1/8.0)	0.43 (3.4/8.0)
'04년 경우(추정) (재정증가율/경상성장률)	0.21 (1.7/8.0)	△0.25 (△2.0/8.0)	△0.11 (△0.9/8.0)	0.8 (6.4/8.0)

자료: 재정경제부

□ 그리고 우리의 재정규모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

- OECD에서 국제비교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발표하는 GDP대비 재정규모에 따르면,
 - o '03년 현재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24.3% 수준으로 OECD 평균수준(40.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OECD, Economic Outlook, 04.6)

□ 지금과 같이 가계, 기업부문이 경제심리의 위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재정수지의 단기균형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시급한 부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도 예산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여야 함.

- 지난해 IMF는 우리나라의 2004년 예산을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예산상의 0.5%적자(3.5조원 적자)가 아닌 GDP 1.5% 규모의 적자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위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단기균형에만 집착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임.
- 내년도 우리경제는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 따라서 내년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8.2조원, GDP대비 1%)를 보다 늘려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연기금의 생산적 활용

- 연기금이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여 사회전체적으로는 자원의 유희화 초래하고 있음.
 -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으로 정부 잉여재원의 민간활용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민연금 여유재원의 재정예수 금지 등의 제약으로 사회보장기금 부문의 저축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국민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혜는 받지 못하면서 각종 사회보장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실제 재정으로부터 지원받는 체감 수혜도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며, 국민신뢰를 손상시킴.
 - 사회보장기금 부문의 정부저축을 생산적 활동에 재투입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재원은 중앙·지방정부가 국방·교육·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SOC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방안으로는, 도로·철도·항만 등 정부재정사업으로 기추진중이거나 완공된 사업 중 경제성이 인정된 사업을 기금이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도 확충
-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연기금의 SOC 투자에 대해 지급보증형태로 채권투자 이상의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경제규모에 비해 절대규모에 있어 지나치게 왜소하며, 그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

< 주요국 GDP 대비 시가총액 비교 >

(%)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02년말	105	111	85	287	114	43
'03년말	130	125	106	408	96	54

- 또한 증시안전판으로서의 기관투자자 및 기금의 비중이 너무 작음으로써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음.

< 주요국 기관투자자 비중 >

(2003년말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기관투자자 비중(%)	16	50	52	21	37
기금비중(%)	3	24	33	13	19

- 현재 54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잔액(Stock)은 '03말 기준으로 190조원 수

준이며 이중 주식보유잔액은 7.6조원으로 4.0% 수준, 나머지는 정부기여금, 금융기관 예치, 채권 투자 등으로 사장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112조원 중 주식은 7.1조원으로 6.3% 수준

< 2003년말 현재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

(단위 : 억원)

	한은예치	금융기관 예치	채권	주식	기타	계
전체 54개 기금* (비중, %)	307,992 (16.2)	316,157 (16.6)	974,779 (51.2)	76,001 (4.0)	228,394 (12.0)	1,903,323 (100.0)
국민연금기금	-	4,501 (0.4)	887,913 (79.4)	70,951 (6.3)	154,917 (13.9)	1,118,282 (100.0)

-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안정성 저해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율(13.0%)은 채권운용 수익률(8.1%)보다 높았음.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추이 >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주식	16.0	5.1	2.9	-24.9	39.5	83.0	-50.9	37.3	-2.3	37.0	13.0
채권	13.5	13.8	13.8	13.4	15.0	12.3	11.0	8.7	7.4	6.2	8.1
전체수익률	12.1	11.8	10.6	8.8	14.4	12.8	4.7	6.4	6.4	7.8	8.7

-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 증시기반을 확충하고 연기금의 안정된 수익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도상 사전적인 제약요인부터 제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주식투자금지조항)을 삭제

* 개별기금 설치법령의 주식투자제한규정을 일괄 폐지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자산운용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연기금은 공동투자풀(Investment Pool)에 대한 위탁을 확대

4. 플랜트 산업의 육성

1) 플랜트 산업의 중요성

- ① 엔지니어링(Engineering), 기계설비의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이 융합된 복합산업(제조업+서비스업)
 - 제작기술, 시공기술, 프로젝트 관리, 파이낸싱, 컨설팅 등 지식산업적 요소가 복합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핵심 주력 산업
 - 국내 산업의 고도화 주도
 - 과거 기자재 조달·시공 중심에서 최근에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관리(PM), 금융조달, 유지보수(O&M) 등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확대
- ② 전후방 산업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 *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 제조업(57%), 서비스업(39%), 플랜트(94%)
 - * 부가가치 기여도 : 수송장비(2.98), 화학(3.63), 전자(5.11), 플랜트(5.74)
- ③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 '90년대 후반 들어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개도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공사 수주가 건설에서 플랜트로 중심 이동
 - 1970년대: 노동집약적 단순시공
 - 1980년대: 노동집약적 비교우위 부분
 - 1990년대: 공종의 다양화, 플랜트 성장
 - 2000년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이
 - * 국내업체 전체 해외수주액 중
 - 플랜트비중(%):('65-95')16.0→('96)39.8→('99)58.9→('03)68.0
 - 토목비중(%):('65-95')38.3→('96)18.5→('99)17.3→('03)10.9
 - 건축비중(%):('65-95')41.2→('96)39.8→('99)21.2→('03)14.5

-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해외 수주액이 연평균 100억불대 진입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1~9
금액(억불)	40	84	101.4	100.6	63.7	73.7
증감율(%)	42.9%	110.0%	20.7%	-0.8%	-36.7%	28.2%

* '03년도는 이라크전과 사스(SARS)로 인해 해외시장 위축

- 향후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확대, 러시아·중앙아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 증가, 아시아 시장 경기회복 등에 따라 해외시장 여건 개선

* 중동 5대 산유국 (사우디·UAE·오만·리비아·이란) 재정흑자추이
1,137억불('02) → 1,537억불('03) → 1,873억불('04 전망)

* LG상사-LG건설 공동으로 3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타타르스탄 정유 및 석유 화학 플랜트 수주

2) 플랜트 산업 육성 방안

① 해외수출 적극 지원

□ 200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플랜트 시장 점유율은 약 2.5% 수준으로 추정(세계 10위 이내, ENR誌)

* 미국: 19.3%, 프랑스 14.6%, 독일 12.5%, 일본 8.5%

< 해외 플랜트 수주 추이 >

	(억불)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세계 플랜트시장 규모	1,159	1,065	1,165	1,398
한국 플랜트 수주	84	101	101	64

* 자료: Engineering News Record(ENR), 산자부

□ 수주 환경의 구조적 변화

- 시장 과점화 및 국제적인 경쟁 격화

○ 미, 일, 프랑스 등 상위 10개사가 세계 시장의 1/4 차지

* ENR 225대 기업중 상위 10개사 수주액 집중도(%) : '95(19.8)→'00(25.6)

○ 해외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플랜트 가격 하락 추세

* 에틸렌플랜트 : '91(1,522\$/톤)→'01(320\$/톤),

LNG플랜트: '91(300 ~ 400\$/톤)→'01(190\$/톤)

○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기업과의 경합이 현실화

* 2002년 ENR 225대 기업중 30위권 기업: 한국(1개), 중국(4개)

- 환경, 생물, 에너지 분야의 복합 플랜트 수요가 증가

* 세계 환경플랜트 성장전망(억불): '00(586)→'05(738)→'10(978)

- 턴키방식 외에 성능보장형,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토탈 패키지형 발주방식 증가

□ 플랜트 산업 수출 전략

- 단기 전략

○ 맞춤형 플랜트 수주 마케팅 활동 전개

○ 금융·정보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 과당경쟁 방지 등 업계 협력시스템 정비

- 중·장기 전략

○ 하도급형 수주에서 개발투자형 수주로 전환

○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 해외플랜트 통합정보망 및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② 플랜트 엔지니어 적극 육성

□ 플랜트 산업 인력 부족

- IMF 이후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플랜트 엔지니어들의 대거 퇴직
- 기업의 대졸 신규인력 충원 급감 - 세대간 기술경험 전달 불가
- 해외플랜트 수주 증가 등 향후 연간 10%성장 예상: 연간 4,000명이상 추가 인력 필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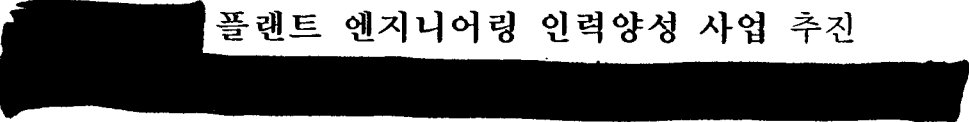
□ 플랜트 엔지니어의 특징

- 인력 양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직접 경험 및 축적된 경험의 간접 전수가 필수적
- 외국의 경우 최고수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
- 공정별 지역별 전문가 필요

□ 우리나라 플랜트 엔지니어 양성 실태

- 체계적인 양성제도(독립된 전공과정 개설 대학) 부재
- 대기업 자체교육 및 도제제도에 의존하여 양성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을 원하나 인건비 과중
- 최근 이공계 기피 풍조로 신규인력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

□ 인력 양성 방안

-  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사업 추진
- 플랜트 엔지니어 국내외 DB 구축
- 재직자 및 신규인력의 교육훈련, 퇴직인력의 재취업 연계 등 인력 서비스망 구축
- 엔지니어 양성 전문 교육과정 설립

③ 정부·공기업 발주 확대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플랜트 기술수준 열세

(선진국=100%)

계획 및 타당성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설시공	유지보수
63%	58%	66%	88%	90%	68%

==> 다양하고 풍부한 시공경험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

□ 공공발주시 PQ제도 변별력 제고

- 사전적격심사제도(PQ), 최저가 낙찰제 등 현행 입찰·계약제도가 시공업체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 가격위주로, 경제적·기술적 요인 보다는 정책적 배려위주(지역업체 배려 등)로 운용되어 온 결과, 기술수준의 낙후를 초래
- PQ 제도 변별력과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내업체들의 기술 수준 제고 기회 제공

□ 포스코, 한전 등 거대기업들의 플랜트 설비 외부 발주 비중 확대

==> 국내 플랜트 기업, 특히 중소 플랜트 업체들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강화 도모

5.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7%, 부가가치의 47%, 고용의 45%를 점유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중추에 해당하고 있음.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구 분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수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제조업 전체	634	100	242	100	270	100
부품·소재	303	47.7	115	47.6	123	45.6

- (부품·소재산업의 영세성) 현재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중심, 조립·가공위주, 해외기술 베끼기 등의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기업들은 조립가공 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략한데 기인
 - 이러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 -> R&D 마케팅 역량부족 -> 저 부가가치의 악순환이 지속됨.
 - *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평균매출액대비 R&D비율(1.41%)을 하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낮은 중저가 부품·소재가 양산되고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 * 약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는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요인임.
 - : 지난 10년간('93-'03)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1,020억불
- 이와는 반대로 최근 부품·소재 관련 기술이 극소·초경량을 추구하는 반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오히려 감축되는 추세여서 부품소재 원천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디젤엔진 연료 분사장치:

Bosch, Delphi, Denso 등 3개사가 세계시장 70% 점유

* 전세계 컴퓨터의 80%가 Intel-inside Chip을 내장

o 또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메이커들이 부품·소재의 세계적 조달 (Global Sourcing)을 확대함에 따라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가속되고 있음

- 결국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1단계 ('87-'95):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 2단계('95-'99):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 3단계('00): 부품·소재발전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왔음

- 그러나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인 조류와는 달리,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은 개별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위주, 건수위주의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부품소재 기업의 전문화·대형화에는 미흡하였음.

- 또한 정부내 부품소재 기술개발 체계도 분산되어 있고, 부품소재 R&D도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보다는 분야별 응용기술에 편중

- 부품·소재산업의 원천기술의 특성상 기초과학에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기업, 학계,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 부품·소재중 국내 개발역량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품·소재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한·일 FTA를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한국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함.
 - 현재와 같이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일 FTA 체결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
- 양국간 FTA 협상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격차 해소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를 적극 요구해야 함.
- 일본정부가 기업투자는 민간간의 문제라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간 협의와는 별도로 민간간 협의기구를 활용해야 함
 - 정부 차원의 한일 FTA협상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간의 협의 기구 발족을 유도하고 정치권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6. R&D 투자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 기존 산업의 고비용 구조 고착화로 '베끼기 투자'에 한계
 - 높은 인건비, 땅값, 물류비용 등으로 과거 발전과정에서 누렸던 '후발자 이익'이 소진되어 더 이상 '베끼기 투자'가 곤란
 - 또한 선진국 기술이전 기피와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한 기술진부화 우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그리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R&D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는 물론 기존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

- 우리나라의 R&D 투자(02년)는 절대규모가 작고 구성면에서도 민간부담이 전체의 74%에 해당

* 1999년 총R&D 투자액 11.9조원 : 정부 3.2조원(26.9%)
민간 8.7조(73.1%)

* 2002년 총R&D 투자액 17.3조원 : 정부 4.5조원(26.3%)
민간12.7조원(73.7%)

- 또한 정부 R&D 투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집중되고 산업체와 대학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산업현장의 '니드(Need)'와 결합되고 지속적인 기술인력의 육성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학연 및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성과에 따라 조세혜택 및 금융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혁신 체제의 구축

- R&D부처를 총괄하는 기술부총리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과학위원회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실질적인 종합조정권을 행사하도록 기능을 재조정

- 또한, 산업현장의 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을 매치시킬 수 있도록 「新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 例) 포항공대 :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 환류, 포철·산업과학연구원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

□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여전

*자연계 수능시험지원자 비율: ('02)26.9% → ('03)30.3% → ('04)31.3%

*서울대 모집단위별 등록률(03):(의대)100%, (자연대)79.1%, (공대)82.9%

*과학고 출신자의 의대 선택비율 증가 : ('02)10.9% → ('03)14.0%

-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공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공계 일자리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

7. 맺음말

- 우리경제에 대한 외부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임. 자신감을 갖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 5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응답자의 55.4%가 긍정적이라고 전망

- 변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의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소득 2만불의 조기 달성도 가능

김진표의원 약력

< 신 상 >

성 명: 김진표(金振杓, KIM JIN PYO)

출생년도: 1947년 生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8-1 살구골 서광아파트 706동 101호

< 학 력 >

1963년 수원중학교 졸업

1966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1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졸업

< 주요경력 >

1973년 행정고시 합격(13회)

1983년 강원도 영월세무서장

1993년 재무부 세제심의관

1996년 재정경제원 공보관, 비서실장

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은행보험심의관

1998년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1999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

2002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2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2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3년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현) 국회 재정·조세연구회 회장(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현), 신산업정책포럼 대표(현)

< 상 별 >

1992년 녹조근정훈장

2002년 청조근정훈장